

군산시, 빈집문제 해법찾기 나서 “우기철 피해 없도록 대응 철저”

중앙정부, 국가 차원에서 직접 빈집 철거·관리·개발 강화·정비 지원 방침 ‘군산시 아젠다 토론회’ 개최...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 모색

군산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발굴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군산시 역시 빈집 문제 해결로 도시·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자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빈집 조사 결과(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4,000호에 달하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3,672호로 조사되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했으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별정 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 지자체에 맡겨 왔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집축출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시·군·구에 있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

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여,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지자체의 빈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시·농어촌으로 이원화됐던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하도록 참고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전담부서가 필요한 지자체는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빈집을 철거해 토지로 소유할 경우, 빈집으로 있을 때보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해 주며,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후과세를 (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이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내 빈집 활용을 위해서는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신설과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활용 가능 빈집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군산시 역시,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군산시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의 아젠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세제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 유도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살아가기 프로그램’으로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의 매칭 추진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추억을 남기는 구도심 빈집 활용 숙박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을 위한 내부 개편도 논의됐다. 현재 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행정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서가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을 위해선 관련 특별반(TF)과 총괄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관리 유지 중인 빈집 활용 사업 개발,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에 해외처럼 빈집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진행했던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회의가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빈집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빈집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를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재난대비계획·추진상황점검 풍수해 대비 보고회 개최... 예방 중심 대응 당부

익산시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자연 재난 대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



시는 1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우기철 풍수해 대비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안전과, 건설과 등 재난·안전 관련 16개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난 사전 대응 방안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현을 시장은 2023년과 20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피해를 겪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녹색 쉼터로 도심에 물들이다

남산초·이리동남초에 맞춤형 정원식 학교숲 조성 예술의전당 등 5곳 유휴지에 ‘정원식 쉼터’ 구축

녹색정원도시 익산시가 푸른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여유를 선물한다.

익산시는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녹색 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학교숲 조성사업은 남산초등학교와 이리동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학교 모두 ‘정원식 녹색쉼터’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순한 조경을 넘어 학습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남산초는 지형을 살린 비탈숲을 조성해 생태적 다양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이리동남초는 기존 스물팜과 연계한 ‘화단숲’을 꾸며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해 대응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하천·하수도·옹벽·급경사지·지하차도·배수펌프장·수해복구사업장 등 재해취약시설을 집중점검했다.

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불가의 재해에 대비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소식통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세금 납부 안내문 발송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와 건전한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익산시는 2만3,000여명의 지방세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송은 총 9만7,000건, 210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납부는 안내문과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 또는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 반호환 영치 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인 징수를 적용해 경제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조속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자칫 반호환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내문 수령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집중안전점검 부단체장 현장 방문

군산시는 두 차례에 걸쳐 ‘2025년 군산시 집중안전점검’ 부단체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26개 분야 110개소에 대하여 6월 13일까지 소관부서,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 민관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9개소(44%) 안전점검을 마친 상황이다.

이번 점검에서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12일 늘푸른도서관, 15일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을 각각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김영민 부시장은 소관부서의 안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을 청취하였다.

김 부시장은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빠른 시일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전북소방,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맞손’

탐지드론 기술 활용 협약 체결... 재난 현장 초기대응 역량 강화

군산시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손을 잡았다.

시와 소방본부는 15일 ‘유해화학물질 탐지드론 기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 현장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유해화학물질 탐지드론 기술’이란,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지점에 소방관 투입 전 드론을 사전에 진입시켜 드론에 장착된 탐지 센서를 통해 유출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소방관은 드론이 보낸 정보를 통해 유출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양을 빠르게 파악하는 한편 안전한 대응 방안을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해화



학물질 탐지드론 기술 도입 외에 △현장 중심의 탐지·분석 체계 마련 △교과·훈련 추진 △사고 발생 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민 군산시장은 “산업단지와 물

류 거점이 밀집한 군산시의 특성상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대응체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역시 “드론을 활용한 탐지 기술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에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현장 정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을 시작으로 군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탐지드론 뿐 아니라 악취 모니터링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재난, 교통,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